

환대의 윤리와 평화*

최진우**

목 차

- | | |
|-----------------------------|-----------------|
| I. 들어가며 | IV. 환대의 윤리를 향하여 |
| II. 타자, 타자성, 타자화 | V. 결론 |
| III. 배제, 차별, 동화, 관용, 그리고 인정 | |

요 약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이방인과의 조우가 급증하고 있다. 이방인은 여러 가지 얼굴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관광객, 유학생,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망명객, 또는 난민 등으로 우리를 방문한다. 초대받지 않은, 갑작스레 ‘우리’를 찾아온 타자(他者)를 우린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타자를 대하는 방식은 배제, 차별, 동화, 관용, 인정의 혼합이었다. 그 중 인정의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다문화주의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글은 타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환대여야 함을 주장한다. 환대란 두 팔 벌려 타인을 환영하는 것을 의미하고, 타자를 자아의 일부로 수용하는 것을 뜻한다. 물론 나를 찾아온 이방인에게 아무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리를 내 주는 이념형적 환대, ‘무조건적 환대’는 실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환대는 ‘조건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 ‘조건’의 벽을 낮추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조건적 환대를 지향으로 삼아 자기중심적인 ‘조건’을 조금씩이나마 허물어갈 때 우리는 타자화의 굴레를 벗어날 것이고 평화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다.

주제어: 환대, 평화, 타자, 민족주의, 다문화주의

* 이 글은 2016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2923970).

** 한양대학교 / 정치학

I. 서론

다문화주의, 탈 민족주의, 지역통합의 심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던 포용과 화해, 협력과 통합의 시대가 인종주의의 재등장, 이민자 거부, 반지역통합 정서의 팽배로 요약되는 배제와 차별, 갈등과 분열의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 타자와의 조우는 늘어 가는데, 타자에 대한 적대와 거부, 배척과 억압의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보편적 인권과 자유, 평등, 법치를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민자와 소수자에 대한 언어적, 물리적 공격 행위가 백주대로에서 일어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벌거벗은 생명’의 상태로 내버려져 불안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하는 ‘이방인’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¹⁾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브렉시트(Brexit)의 현실화는 글로벌 사회의 구성 패러다임이 거대한 변화의 단계에 돌입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이어 미국 대선에서 워싱턴 정가의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당선되면서 미국 국내정치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국제경제, 글로벌 문화에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당선은 민족주의의 시대가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이자 전 세계적 차원에서 민족주의를 확산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²⁾ 1789년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본격 접화된 민족주의의 돌풍은 국가 간의 극심한 경쟁과 갈등을 촉발해 20세기 전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의 원인이 됐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대전쟁의 참화를 겪은 선진 각국의 시민과 정치지도자들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위험성을 극복하는 것을 평화의 전제로 인식했다.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적어도 서유럽에서는 민족주의는 과거의 유물로 간주됐던 것이다.

그러나 세계 각지에서 민족주의의 소용돌이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브렉시트는 ‘영국성’(Britishness)를 훼손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민과 유럽통합에

1) 아감벤(1998) 참조.

2) 영국의 시사주간지 *The Economist*는 트럼프 당선 후 두 번째 호의 표제를 ‘신민족주의’(the new nationalism)로 정함으로써 지구촌 곳곳에서 다시 민족주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The Economist* Nov. 19-26, 2016).

대한 반대의 목소리였다. 트럼프의 당선은 무슬림 입국 제한과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공언한 지극히 배타적인 미국중심주의적 캠페인의 결과였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민족의 이름으로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수상은 아베노믹스의 물적 기반 위에서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거세게 추진하는 중이다. 중국의 시진 핑 주석은 ‘대국굴기’를 추구하면서 중화민족주의의 열기를 정치적으로 십분 활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변국들과의 갈등적 상황이 반복적으로 연출되고 있다.

유럽에서의 사정도 심각하기 이를 데 없다. 다수의 국가에서 배타적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극우정당의 약진이 목격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민족주의적 극우파인 영국독립당(UKIP: UK Independence Party)이 브렉시트를 주도했다. 프랑스에서는 극우정당 국민전선(Front National)이 약진에 약진을 거듭해 2017년 대선에서는 마린 르펜(Marine Le Pen) 후보가 1차 투표를 통과해 두 명의 후보가 맞붙는 결선투표에 진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비록 2017년 대선에서는 신생정당인 진진당(En Marche)의 엠마누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후보에게 65.8% 대 34.2%의 득표율로 패배했지만, 극우 국민전선의 지지 기반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향후 프랑스 정치에 있어 주요 행위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황에 따라 대선에서 승리가 머지않아 현실화될 지도 모른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태리에서는 2016년 12월 4일 마리오 렌치 수상의 개헌안이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들의 저항으로 국민투표에서 좌초돼 이태리 정국이 안개 속에 휩싸이게 됐으며 다음 총선에서 유럽통합을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집권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2016년 12월 사상 최초로 극우파 대통령이 선출될 것으로 점쳐졌으나 열세를 뒤집고 중도좌파 대통령이 당선돼 극우 열풍을 일단 잠재웠지만, 2018년 총선에서는 극우 자유당의 집권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헝가리와 폴란드는 이미 극우정당의 집권 후 민주주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이민에 대한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 전통적으로 친이민, 친유럽적 성향을 보이고 있던 나라들에서도 이민 혐오의 목소리와 반 유럽

정서가 팽배하고 있다.

민족주의가 고개를 들면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외국인에 대한 혐오, 특히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노골적으로 표면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브렉시트 가결 후, 그리고 트럼프 당선 확정 후 영국과 미국 사회에서는 이민자와 유색인종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과 공격의 사례가 급증한 바 있다. 이민자에 대한 반감의 근저에는 일자리 경쟁, 복지 혜택 축소, 문화적 이질감 등의 문제가 있다. 여기에 9.11 이후 종교적 정체성과 문화적 정체성이 안보화(安保化)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이민자에 대한 반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고, 유럽에서는 중동과 아프리카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해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반 이민 정서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민족주의의 망령을 가장 먼저 떨쳐낸 곳, 다문화주의가 가장 앞서 꽃을 피운 곳, 지역통합의 모델이 되었던 유럽에서조차 혐오와 적대의 언어로 무장한 극우세력이 등장해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선언하고 유럽통합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 타자에 대한 관용과 타자성에 대한 인정에 기반을 둔 다문화주의는 왜 실패하고 있는가? 다시 암울해지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타자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II. 타자, 타자성, 타자화

초대받지 않은 손님, 불쑥 나타난 이방인, 갑작스레 ‘나’(또는 ‘우리’)의 공간으로 들어온 타자(他者)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정해진 법이나 규칙이 있는가? 아니면 윤리적 요청을 따라야 하는가? 그러한 법과 규칙, 그리고 윤리관은 어떤 것인가? 이것들은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타자로서의 이방인과의 조우가 급증하고 있다. 이방인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관광객으로, 유학생으로, 사업을 하러, 일자리를 찾아, 결혼을 위해, 정치적 신념이나 종교 또는 인종적 이유 등으로 인한 박해를 벗어나기 위한 망명객으로, 재난

과 전쟁의 현장에서 피신하기 위해 난민으로, 그리고 그 어떤 경우든 ‘타자’로서 우리를 방문한다. 그 방문은 일시적인 경우도 있으나, 영구적일 수도 있고, 정해져 있지 않을 수도 있다. 타자는 호기심과 매력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두려움과 배척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무시와 천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³⁾

그런데 타자는 누구인가? 타자는 영원히 타자일 수밖에 없는가? 바로 우리가 타자가 될 가능성은 없는가? 타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타자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타자가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이지만, 즉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성원권’을 갖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무언가를 이유로 우리 중에 누군가를 ‘타자화’시키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이념, 종교, 출신 지역, 학연, 성적 취향 등등의 이유로 우리는 끊임없이 타자를 타자화하고 있으며, 어느 순간, 어느 공간에서는 바로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 타자화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른바 ‘왕따’로 불리는 누군가를 따돌리는 행동의 근저에는 타자화의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

여기에서 타자는 대체로 지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열등한 존재 또는 도덕적으로 위협적인 존재로 규정된다. 즉 타자에게는 ‘우리’와 단순히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보다 열등하거나 뭔가 잘못된 인간관과 세계관을 가진 존재라는 속성이 부여되며, 이것이 곧 타자성을 구성하게 된다. 타자화란 타자에게 타자성을 일방적으로 부여하고 이에 근거해 타자를 대하는 것, 즉 다름을 다름으로써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됨이나 열등함으로 규정하면서 배척과 배제의 대상 또는 억압과 교정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일체의 사유 활동 및 행동을 일컫는다.⁴⁾ 과연 그런 타자화는 어떻게 극복이 될 수 있는가? 지금까지 타자화의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기존의

3) “이방인은 안정적인 주체에게 때로는 자극과 매혹으로, 때로는 당혹과 위협으로 표상돼 왔다”는 지적이 바로 이런 의미일 것이다(김애령 2015, 183).

4) 서구 문화는 지금까지 줄곧 타자를 ‘악마화’해 왔다고 한다. “서구의 사유는 일찍이 선(the Good)을 자아 정체성 및 통일성의 개념과 동치시켰으며, 악의 경험을 우리 밖의 이질적 존재와 연결시켰다. 거의 언제나 타자성은 영혼의 순수한 단일성을 오염시키는 이질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Kearney 2004, 106)는 것이다(김희정 2008, 31에서 재인용).

대응 방식은 얼마나 효과적이었으며,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가? 그 한계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사실 타자성은 절대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대적인 것이기도 하다. 타자는 우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절대적이지만, 타자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이기도 하다. 타자는 우리에게 의해 범주화되기도 하고 차등화 되기도 한다. 우리의 (대체로 단순하고 자의적인) 범주화와 차등화에 따라 타자는 차별화된 대우를 받는다. 우리의 구성원과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은 물론이요, 타자들끼리도 다른 대우를 받는다. 한국 사회에서 백인과 유색인종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타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의 예다. ‘우리’의 일원과 다른 대접을 받는 것, 그리고 타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은 과연 타당한 일인가? 법적으로 정당하며 윤리적으로 합당한 것인가? 범주화와 차등화는 어떤 기준에 근거하는가? 범주화와 차등화를 포함해 우리가 타자를 대하는 시각, 타자를 응대하는 제도적 또는 사회적 방식은 정당한가? 타자의 문제에 접근하는 인식적 및 실천적 패러다임은 어떻게 현실 속에서 구현되는가? 현실과의 긴장관계는 없는가? 타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가? 그 패러다임에 대해 ‘우리’ 사이에서는 이견과 반대는 없는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되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맞는가?

이 글에서는 타자화는 멈추어져야 하며, 타자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중화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타자를 바라보는 시선과 타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환대여야 함을 주장한다. 환대란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이방인(타자)에 대한 다정하고 관대한 수용을 뜻하는 것으로 이방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 수용적이고(receptive) 개방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open-minded) 이방인을 따뜻하고(warm), 친밀하고(friendly), 포용적(generous)으로 맞이하는 것을 말한다(Brown 2010, 309). 환대는 이방인의 권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의무일 수도 있으며, 세계시민의 윤리일 수도 있다.

사실 어찌 보면 인간의 역사는 타자성으로부터의 해방의 역사였다. 과거 노예는 시민의 범주에 들지 못하는 별개의 존재였다. 시민의 영역에 들어올

수 없는, 시민과는 ‘다른’ 존재였던 것이다. 인간의 범주에 들지 못하는 열등한 존재로서의 노예는 시민에게 있어 ‘타자’였다. 노예 해방은 바로 노예의 타자성이 소멸된 사건이었다. 신분제도도 마찬가지다. 천민과 평민이 신분의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만인이 평등해짐으로써 신분이란 이름의 타자화를 벗어났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타자화는 계속되고 있다.

타자화는 필연적으로 배제, 차별, 억압을 수반하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저항을 유발하며, 이로 인한 갈등은 격렬한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기도 한다.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전이 전개되기도 하며 국가 간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 학살이 자행되기도 하고 대량 난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또 다시 누군가의 ‘타자’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로 인한 갈등의 순환이 시작된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타자화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자화가 지속되는 한 갈등과 충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타자화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은 ‘자아의 확장’이다. 타자를 자아의 범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아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타자가 가진 타자성을 내가 수용해 자아의 일부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자아는 변용을 겪게 된다. 기존의 자아를 구성하던 요소와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요소가 함께 섞여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타자에 대한 환대다. 환대란 두 팔 벌려 타인을 내 집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타자를 자아의 일부로 수용하는 것을 뜻한다.

Ⅲ. 배제, 차별, 동화, 관용, 그리고 인정

지금까지 행해진 타자를 대하는 방식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배제, 차별, 동화, 관용, 인정이 그것이다. 타자를 대하는 방식은 때때로 과거의 방식으로 회귀하기도 하고 같은 공간 안에서(예컨대 한 나라 안에서) 범주를 달리하는 타자 집단들에 대해 각각 다른 방식이 동시에 적용되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위의 순서에 따라 조금씩 진화해 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배제(exclusion)는 그야말로 혈연적 또는 종교적 순혈주의에 입각해 타자를 ‘우리’의 공간에 받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소극적으로는 이민자 유입을 거부하거나 매우 엄격하게 통제하는 정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적극적으로는 소수자 집단의 추방 또는 학살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쇄국정책이나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당시 헝가리 등의 국가들이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장벽을 설치한 것 등이 소극적 배제 정책이다. 1990년대 발칸 반도에서 구 유고슬라비아 해체 과정 중 일어났던 보스니아 내전 당시 자행된 인종청소는 적극적 배제정책에 해당하며, 르완다 내전과 수단 내전에서 나타났던 강제이주 또한 그 예가 될 것이다. 나치 독일이 독일민족의 ‘생존공간’(lebensraum)을 넓히려는 침략전쟁을 수행하면서 유럽 전역의 점령지에 거주하던 유대인을 소멸시키고자 했던 인류사 최악의 전쟁 범죄인 홀로코스트 또한 이러한 발상에서다.

차별(discrimination)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법적, 제도적 권한에 대한 접근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회적 차별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미국에서 노예해방 이전은 물론이요 1964년 민권운동에 의해 참정권을 인정받기 전까지 흑인에게 행해졌던 다양한 제한 조치가 여기에 해당되며,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또한 하나의 극명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민주주의 가치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린 구미 각국에서조차 근로현장에서 이른바 ‘동일 근로, 동일 보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사회적 차별 현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우리나라에서 한때 화교들의 재산권을 제한했던 것도 차별의 제도화의 한 예라 하겠다.

동화(assimilation)는 소수자 집단으로 하여금 주류집단의 관습과 제도, 문화와 정체성 모두를 수용할 때 배제와 차별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단 하나의 정체성만 인정되며,⁵⁾ 이 정체성을 수용할 때는 사회

5) 최근 독일의 마이지에르(Thomas de Maiziere) 내무장관은 일간지 빌트(Bild)에 기고한 칼럼에서 독일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자문하면서 독일어, 독일 헌법에 더해 독일의 표본적 문화(Leitkultur: guiding national culture)를 중요한 요소로 들고

의 일원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의 보호와 제반 시민적 권리의 행사가 제한된다. 대부분의 국가들의 이민자를 대하는 태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높은 수준의 언어구사능력이 시민권 또는 영주권 취득의 조건이 되거나 주류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 가치관, 관습의 수용 여부가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음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우 이러한 정책 또는 사회적 분위기는 동화의 패러다임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이른바 ‘다문화정책’은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의 예법과 문화를 교육시키고 수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상 전형적인 동화정책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사람들이 기존의 삶의 양식과 사고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동화는 소수자들의 인격과 인간성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기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는 속담은 한편으로는 방문자가 타국을 방문할 때 그 나라의 법과 관습을 존중하는 것이 좋다는 현실적 조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방문자 자신의 고유의 정체성을 버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화의 원칙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관용(tolerance 또는 toleration)은 동화정책에 비해서는 타자에 대해 관대하다. ‘우리’의 공간 안에서 타자가 자신의 고유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존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관용은 언제라도 베푸는 자에 의해 철회될 수 있다. 관용은 힘의 비대칭성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며 시혜자의 자의적 처분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타자의 인격과 인간성에 대한 위협이 잠재된 상태다. 관용의 윤리는 철저하게 주체중심적 윤리이다.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다음과 같이 관용의 한계를 지적한다.

있다. 마이지에르 장관은 독일문화를 짧게 설명하는 가운데 “우리는 악수를 하고, 부르카를 입지 않고, 성실한 근로윤리를 갖고 있고, 교육과 예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나토(NATO), 유럽, 그리고 서방의 일원”이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특징이 바로 현재의 독일 문화를 구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향해야 할 바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에서는 표본적 문화를 정형화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강요하는 것은 독일적 가치에 부합하는 일이 아니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아니라는 반론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New York Times*, May 10, 2017 참조). 마이지에르 장관의 발언은 ‘동화’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관용은 자비의 한 형태입니다. ... 관용은 늘 ‘최강자의 논거’ 편에 있습니다. ... 관용은 주권의 대리 보충적 흔적이죠. 주권은 오만하게 내려다보면서 타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살아가게 내버려 두마, 넌 참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니야. 내 집에 네 자리를 마련해두마. 그러나 이게 내 집이라는 건 잊지 마.... 관용은 바로 이와 같은 주권의 선한 얼굴입니다. ... 프랑스에 ‘관용의 문턱’(threshold of toleranc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국가 공동체에게 더 이상의 외국인이나 이민 노동자 등등을 환영해 달라고 하는 것이 예의에서 벗어나게 되는 한계를 그렇게 부르죠. ... [관용의 문턱이란] 곧 사람들은 이방인, 타자, 외래 물체를 어떤 지점까지는 받아들인다는 것, 즉 아주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Derrida 2004, 232-233).⁶⁾

테리다는 강자의 자비가 제공하는 관용으로 이방인의 권리를 마련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이방인과의 평화로운 공존의 원리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관용의 정도, 즉 ‘관용의 한계성’ 설정이 권력을 가진 자의 ‘자의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관용에 기대는 소수자, 이방인 집단은 불평등한 수혜적 관계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또한 관용의 문제점을 비판한다.

관용의 행위는 자비로운 행위나 ‘은혜 베풀기’와 같은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수당은 소수당이 ‘통상적인 것’에서 일정 정도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만, 이것은 관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수파가 ‘관용의 한계선’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입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허용의 관점’에 대해 비판이 가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비판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수용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주는 관용의 한계선은,

6) 이 인용문은 지오반나 보라도리, 손철성 외 옮김, 『테러시대의 철학: 하버마스, 테리다와의 대화』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4)에 포함돼 있다. 이 책의 원전은 Giovanna Borradori, *Philosophy in a Time of Terror: Dialogues with Jürgen Habermas and Jacques Derrid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이다. 이 책은 미국 뉴욕주(州) 바사 대학(Vassar College)의 철학 교수 지오반나 보라도리가 9.11 테러 사건 이후 이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위해 당대 최고의 철학 거장인 위르겐 하버마스와 자크 테리다를 잇달아 인터뷰한 내용을 영어로 정리한 책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어 번역본을 기준으로 주석을 달았으나 내용 확인을 위해 영어 원본을 동시에 참조했음을 밝힌다.

명백하게 기존의 권위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설정됐기 때문입니다(Habermas 2004, 86-87).

한편 인정(recognition)은 나의 공간 속에 나오는 정체성을 달리 하는 타자가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존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관용은 타자의 정체성을 내심 못 견뎌 하면서도 내색을 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지만, 인정은 타자의 정체성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할 뿐 아니라 타자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반응”을 나타내기도 한다(문성훈 2011, 412). 다만 인정은 상대에 대한 인정일 뿐 타자의 정체성을 내 안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타자의 정체성과 나의 정체성이 하나의 공간에 공존해도 괜찮다는 태도이긴 하지만 엄연히 타자의 정체성과 나의 정체성은 별개의 것이고, 서로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소수 집단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나와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내가 나의 정체성을 변화시킬 이유를 찾지 않는다.

이는 이질적 정체성을 가진 집단의 공존 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데, 다문화주의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정체성을 달리하는 집단들이 각각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실천하며 한 사회 내에서 공존하는 것을 일컫는다. 각 집단이 자신들의 문화적 권리를 향유하며 또 이러한 문화적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때로는 소수 집단의 정체성과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 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와 같은 역차별적 제도를 만들어내기도 한다.⁷⁾

이와 같이 다문화주의의 근간이 되는 인정은 종종 투쟁을 통해 획득된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나와 타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 나를 나로써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나와 상대방이 생각하는 내가 일치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나의 정체성을 잘못 알고 있으면서 나를 인정하는 것은 사실 진정한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7) 그러나 다문화주의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또한 문화의 섞임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다문화주의는 어쩌면 ‘일종의 문화적 분리주의’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김희정 2013, 30).

진정한 나를 알게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인정을 위한 투쟁이 된다.

호네프(Axel Honneth)에 따르면 이러한 인정의 투쟁 과정은 나와 상대방이 서로를 인정받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나와 상대방은 더욱 고양된 자아를 형성하면서 공존과 화해에 이를 수 있게 된다고 한다(문성훈 2011, 413; 호네프 2011).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나와 상대방이 인정투쟁을 통해 상호간의 인정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고 보다 고양된 자아의 형성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자아의 고유성은 철저히 유지된다는 점이다. 즉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나와는 철저히 분리된 존재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나와 분리된 존재로서의 타자와 나의 관계에서는 언제라도 인정의 철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인정에 기반을 둔 공존은 긴장된 평화, 불안한 평화, 일시적 평화를 가능하게 할 수는 있으나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는다. 언제라도 인정의 철회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타자성의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타자성의 복원은 곧 인정의 철회를 의미하고, 인정의 철회는 타자와의 공존상태가 타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상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며, 따라서 억압과 반항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배태하게 된다. 국내적으로는 위태로운 공존상태에 있던 주류집단과 소수집단의 충돌이 재연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국가들 간의 타자화가 과정이 다시 작동되면서 긴장이 심화되고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중세 기독교도와 이교도 간의 관계가 바로 그러했다. 중세의 기독교적 평화관념에 따르면 “기독교도와 이교도 간에는 기껏해야 일종의 공존협정(concordia)만이 가능할 뿐”이었다고 한다(Jamssen 2010, 37; 도종윤 2016, 77에서 재인용). 이는 곧 양자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가운데 공존상태를 유지하기는 했으나, 이는 위태로운 평화를 유지하는 관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공존의 기반은 인정이었으며, 인정만으로는 안정적인 평화의 구현이 어려웠던 것이다. 오늘날의 다문화주의가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다문화주의 거버넌스 하에서는 다양한 문화집단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 주면서 거시적 공간의 차원(예컨대 국

가)에서 공존하고 있지만 미시적 공간의 차원(예컨대 마을)에서는 서로 분리돼 있고 서로에 대한 수용에는 지극히 소극적이다. 하물며 관용과 동화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인정, 관용, 동화는 모두 주체중심적 윤리관에 입각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주체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철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화의 착근을 위한 실천 윤리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IV. 환대의 윤리를 향하여

인정에 기반을 둔 다문화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타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환대여야 한다. 환대란 두 팔 벌려 타인을 내 집의 식구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타자를 자아의 일부로 수용하는 것을 뜻한다. 환대는 타자를 대함에 있어 ‘자아의 확장’을 시도하는 태도다. 타자를 자아의 범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아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타자가 가진 타자성을 내가 수용해 자아의 일부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자아는 변용을 겪게 된다. 기존의 자아를 구성하던 요소와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요소가 함께 섞여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와 타자는 ‘공생의 관계’에 진입한다. 공생의 관계에서는 자아와 타자의 구별이 희석되며, 자아의 확장을 통해 더욱 고양된 자아가 형성된다.

환대의 개념은 멀리 그리스 스토아 학파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며(최병두 2012, 17), 후기 스킨라 철학, 자연법 사상, 계몽주의 철학으로 이어지는 서양 철학의 전통 속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환대의 보편적 법칙(universal laws of hospitality)을 옹호해 왔고, 16세기에는 스페인의 신부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Bartolome de las Casas)가 환대의 자연법을 근거로 남아메리카 원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스페인 제국주의자의 만행을 고발하고 있다(Brown 2010, 308-309). 근대에 들어 환대의 개념을 다시 거론함으로써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환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킨 것은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다.

칸트는 <영구평화론>에서 국제평화를 위한 세 개의 확정조항(definitive article) 중 세 번째 조항에서 ‘세계시민권은 보편적 환대의 조건들에 국한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⁸⁾ 여기에서 ‘환대’란 ‘이방인이 타국에 갔을 때 적대적인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이방인을 맞이하는 국가는 ‘추방이 이방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그 땅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방인이 평화롭게 공간을 차지해 머무른다면 그에 대해 적대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이 영주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방인에게 일정 기간의 거주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서는 ‘별도의 우호 협약’이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일시적인 체류의 권리이며 교제의 권리일 따름이다. 이러한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지구의 표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표면에서는 사람들은 무한정 새로운 땅으로 흩어져 살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모두가 어느 지점에서는 타인의 존재를 용인해야 한다. 원래 그 누구도 지표면의 특정 부분에 대해 타인에 우선하는 권리를 가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칸트에게 있어 이방인은 한편으로는 ‘지구의 표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세계시민의 일원이지만 타국에 대해서는 일시적 방문과 교제의 권리를 가질 따름이며 방문 기간 동안 ‘적대적으로 취급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 존재다. 이러한 권리가 세계시민권이라는 점에서 세계시민권은 한 국가의 시민권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이다. 즉 어디를 가나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일시적 방문자로서 환대받을 권리(적대적으로 취급받지 않을 권리)만을 향유할 뿐이다.

칸트에게 있어 특징적인 것은 환대가 하나의 ‘권리’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다(Benh Habib 2004, 26). 인간은 누구나 세계시민으로서 외국을 방문할

8) 이 조항의 독일어 원문은 “Das Weltbürgerrecht soll auf Bedingungen der allgemeinen Hospitalität eingeschränkt sein”이며 영문으로는 “Cosmopolitan Right shall be limited to Conditions of Universal Hospitality”로 번역된다(Derridat 2000, 3). 영원한 평화를 위한 다른 두 개의 확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 1 확정 조항은 “모든 국가의 헌정체제(civil constitution)는 공화정(republican)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제 2 확정 조항은 “국제법(the law of nations)은 자유로운 국가들(free states)의 연방제(confederation)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 ‘환대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뒤집어 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 땅에 들어온 외국인을 ‘환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세계시민법에서 생성되고, 세계시민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모든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며, 또한 지구표면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한편 칸트는 영구평화를 위한 조건으로 세계시민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세계시민법의 적용성이 보편적 환대의 조건에 국한돼야 한다고 했던 말은 방문자의 입장에서는 일시적 체류의 기간 동안에 한해 환대받을 권리가 있지만 일방적으로 타국의 영토를 점유하고 스스로 그 곳에서 영속적으로 거주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권리는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외국인이 영속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우호조약’이 필요하다고도 한다. 이는 18세기 유럽의 제국주의가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로 진출하면서 폭력적으로 원주민을 학살하고 재산을 빼앗고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준열한 비판인 것으로 생각된다. 원주민은 이방인을 환대해줄 의무가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체류 기간에 한한 것이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내줄 의무까지는 없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제국주의적 침탈이 인간의 이성에 반하고 세계시민법에 어긋나며 국제평화를 해치는 일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찌 보면 칸트는 이방인과 원주민 모두에게 서로를 환대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주민은 이방인을 배척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그들은 지표면을 공유하는 세계시민으로써 지구상 어디든 방문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이방인은 원주민을 침탈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권리는 일시적인 외국 방문 기간 동안 평화롭게 처신한다는 조건 하에서 환대받을 권리, 즉 적대적으로 취급받지 않을 권리에 국한되며 혹 영구적인 체류를 원할 때는 별도의 우호조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칸트는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지킴으로써 국제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즉 환대는 국제평화의 초석인 것이다.

한편 테리다는 칸트의 환대 개념을 ‘조건부 환대’로 규정하며 관용과 다름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환대의 조건을 주권자가 결정하고 이방인을 환대할 것인지의 여부를 주권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해 놓았다는 이유에서다.

제한된 관용도 절대적 불관용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관용은 여전히 세심하게 따진 환대, 감독하는 환대, 인색한 환대, 자신의 주권에 집착하는 환대에 불과합니다. 가장 좋은 경우라고 해봤자 이를테면 제가 말하는 조건적 환대에 속할 따름이죠. 우리는 타자가 우리의 규칙을, 삶에 대한 우리의 규범을, 나아가 우리 언어, 우리 문화, 우리의 정치 체계 등등을 준수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환대를 제의합니다. 흔하들 이해하고 실천하는 환대란 바로 이런 거죠. 민족적, 국제적, 나아가 세계시민적—칸트가 어느 유명한 글에서 말한 것처럼—성격을 갖는 관습, 법률, 규약을 발생시키는 것도 바로 이런 환대입니다 (Derrida 2004, 233-34).

데리다는 칸트의 ‘조건적 환대’를 넘어서는 ‘무조건적 환대’를 주창하고 있다.

하지만 순수한 환대나 무조건적 환대란 그 같은 초대가 아닙니다. 순수하고 무조건적 환대는, 환대 그 자체는, 기대되지도 초대되지도 않은 모든 자에게, 절대적으로 낮은 방문자로 도착한 모든 이에게, 신원을 확인할 수 없고 예견할 수 없는 도래자에게, 사전에 미리 개방돼 있습니다. 이를 초대(invitation)의 환대가 아니라 방문(visitation)의 환대라 부릅시다(Derrida 2002, 234).

데리다의 무조건적 환대의 개념은 거의 신의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연상시킨다.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에도 비견할 만하다. 타자가 누구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할 것인지 일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적으로 환대를 해서 내 집 안으로 들이고 나의 것을 나누어주라는 것이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원래 집이란 원래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공간’으로써 그 구성원은 ‘익숙하고 친밀한’ 사람들이다. 타자에 대한 환대란 따라서 내 집에 ‘낯설고 편안하지 않은 사람을 들이는 것’으로, 이는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며 심지어는 위협을 수반하기도 한다(김정현 2015, 333). 무조건적 환대는 주체와 타자와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로 변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 환대는 따라서 극도의 위협성이 수반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위협성의 내포가 바로 환대의 필수조건이기도 하다. 위협성이 없다는

확신에서의 환대는 이미 조건적 환대이기 때문이며, 불완전한 환대이고, 주체중심적 환대이기 때문이다(손영창 2012, 105). 사실 무조건적 환대는 철저하게 타자중심적 윤리다. 무조건적 환대는 ‘타자/타인을 그 자체로서의 충만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김희정 2013, 36). 무조건적 환대는 ‘타자에 대한 주체의 평가나 파악, 인식, 이해를 뛰어넘는 적극적인 경향’에 해당하는 것이고, 레비나스는 이것이 바로 타자중심적 윤리라고 한다(김애령 2008, 190).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이방인을 환대함으로써 타자중심적 윤리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인간성에 대한 존중이 ... 국경 앞에서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김정현 2015, 318)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또는 용인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환대와 세계시민주의(세계시민권) 등의 개념은 이러한 상황의 타개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등장한다”(김정현 2015, 318).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실천적으로 가능한가? 데리다는 가능하지 않다고 단언한다.

확실히 무조건적 환대로 삶을 영위한다는 건 실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또한 이 순수 환대라는 개념이 어떤 법적 지위나 정치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환대를, 환대 그 자체를, 최소한 사유해보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환대 일반의 개념을 갖지 못할 것이며 (자신의 의례와 법규, 규범, 국내적 관례나 국제적인 관례로 이루어지는) 조건부 환대의 기준조차 정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순수 환대의 사유 ... 없이는, 타자에 대한 관념, 타자의 타자성에 대한 관념, 다시 말해, 초대받지 않고도 당신 삶으로 들어오는 그(녀)에 대한 관념을 갖지도 못할 겁니다. ... 무조건적 환대는 법적이지도 정치적이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것과 법적인 것의 조건입니다(Derrida 2002, 234-35).

데리다에 의하면 무조건적 환대가 실천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념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다(김애령 2008, 192). 무조건적 환대의 이념은 현실 속에서의 환대의 실천이 지향해야 할 바를 우리에게 일깨워줌으로써 현실비판적 대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Shyrook 2008,

414). 무조건적 환대의 이념은 끊임없이 현실과 긴장관계를 형성하면서 환대의 실천 수준을 끌어올리게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환대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며, 또 기쁨을 가져다준다. 우리가 환대하는 이방인은 우리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 ‘경계인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 준다. “객관적인 인간은 주어진 것에 대한 인식, 이해 및 평가를 미리 결정짓는 그 어떠한 고착된 관념에도 속박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짐멜은 이처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자유’라고 부른다(Simmel 2005, 83; 김애령 2008, 179에서 재인용).

아울러 타자를 내 안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환대는 곧 우리 자신의 변화를 촉발한다. 우리는 변화를 통해 삶의 새로운 지평을 맞이한다. “환대로 인한 이 변화로 인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창조할 기회를 얻는다”(김정현 2015, 319).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다. 타자에게 우리를 내어줌으로써 오히려 우리는 새로운 것, 즉 거듭난 삶을 얻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다(김정현 2013, 52). 이러한 환대의 최종 단계는 타자를 나 자신처럼(혹은 나 자신으로) 여기게 되는 상태가 될 것이다(김정현 2015, 334).

V. 결론

그렇지만 현실 속의 정치사회에서는 힘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환대조차도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아직까지 세계시민권이 확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힘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관계에서는 상호 환대 행위의 개시, 환대 행위의 지속성은 결국 힘의 우위에 있는 자의 결단에 의존하는 바가 클 수밖에 없다. 사실 환대의 실천이라는 윤리적 요청에 부응하는 일은 매 순간 결단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무조건적 환대는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성도, 이람도, 성별도, 아무 것도 묻지 않고 내 집 안에 들인 이방인이

나를 죽일 수도, 내 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실 속에서는 두 팔 벌려 환영한 난민이 테러리스트로 돌변할 수도 있고 소매치기로 둔갑할 수 있으며 성폭행을 저지를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이들을 환대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환대를 철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대는 지극히 타자중심적 윤리이지만 환대의 실천은 자아의 결단을 요구한다. 힘의 비대칭성의 관계 속에서는 환대의 철회에 대한 유혹이 클 가능성이 높다.

환대의 실천은 일회성 행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이 특히 지속적인 결단을 요구하게 된다. 특히 사회적 환대, 국가적 환대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성도, 이름도, 성별도, 종교도, 학력도, 아무 것도 묻지 않고 덜컥 내 집안에 들여놓고 그 다음엔 알아서 살아가라고 한다면, 이는 이방인을 또 다른 황야에 내던져 놓는 것과 다름없는 일일 것이다. 냉장고가 어디에 있는지,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주방기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알아서 먹고 알아서 생활하라고 한다면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급기야 주인이 차려 놓은 식탁에 달려들 수도 있고 적절치 않은 장소에서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노릇이다.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환대는 일련의 과정이어야 한다. 집안에 들이는 것부터 시작해 그 집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줘야 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집에서 계속 머물러 살 수 있음을 확신시켜줘야 할 것이다. 불쑥 찾아온 손님은 대체로 삶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큰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일 확률이 높다. 이들에게는 내일을 위한 준비보다는 하루하루의 생존이 급선무다. 이들은 미래의 그림자가 매우 짧은 사람들이다. 환대를 해 주는 집주인에게 대한 태도와 행동 또한 그럴 수 있다. 길게 보고 서로를 환대하는 마음을 키워가기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집주인의 환대를 이용하려 할 수 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과연 내일도 계속 환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지극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오랜 기간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쳐온 결과다. 때문에 환대를 환대로 돌려주지 못하고 환대를 기만이나 배신으로 갚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랬을 때, 손님에게는 헤어날 수 없는 낙인이 찍혀버리게 된다. 살아온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생래적인 불안감,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무지, 자그마한 욕심, 순간적인 판단의 실수 등이 결합돼 범죄자로, 낙오자로, 일탈자로 폐각추방(ostracize) 되고 만다. 이때부터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 손님은 집주인의 환대에 적절하게 응답하지 못한 죄로 집밖으로 내쳐지거나 집 어느 한 구석에 격리돼 자유와 평등, 자기실현의 기회 등을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한 채 살아가게 되면서 새로운 불안감과 불만감을 품게 되고 자신을 내친 집주인에 대한 복수를 꿈꿀 수도 있는 노릇이다.

따라서 환대의 실천은 전폭적이면서도 신중하고도 사려 깊게 진행돼야 한다. 나를 찾아온 이방인에게 아무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리를 내 주는 ‘무조건적 환대’는 실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위험성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환대는 ‘조건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 ‘조건’의 벽을 낮추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조건의 벽을 쌓아 올리자는 유혹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올 것이다. 극우주의자, 포퓰리스트, 인종주의자, 국수주의자들이 그 주인공이다. 그 유혹에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타자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 퇴행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고 다시 타자화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무조건적 환대를 지향으로 삼아 자기중심적인 ‘조건’을 조금씩 허물어갈 때 우리는 타자화의 굴레를 벗어날 것이고, 평화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애령. 2008. “이방인과 환대의 윤리.” 『철학과 현상학 연구』 39집. pp.175-205.
- 김정현. 2013. “상호성의 윤리와 타자 중심성의 윤리: 리퀴르와 레비나스의 조우, 그리고 문화 간 관계에 대한 그 함축.” 『해석학연구』 32집. pp.29-70.
- 김정현. 2015. “외국인이라는 문제, 그리고 환대: 폴 리퀴르의 견해를 중심으로.” 『코기토』 78. pp.316-348.
- 김희정. 2013. “환대의 윤리: 마르코 톨리오 조르다노의 영화를 중심으로.” 『지중해지역연구』 15(3). pp.27-46.
- 도중윤. 2016. “환대 윤리의 국제정치학에의 적용과 한계: 환대와 평화의 접점.” 『문화와 평화: 환대와 적대의 문화정치』 한양대 평화연구소, 제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논문집.
- 문성훈. 2011. “타자에 대한 책임, 관용, 환대 그리고 인정: 레비나스, 왈쩌, 데리다, 호네프를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21집. pp.391-418.
- 손영창. 2012. “데리다의 무조건적 환대와 타자성.” 『프랑스문화연구』 24집. pp.97-127.
- 최병두. 2012. “이방인의 권리와 환대의 윤리: 칸트와 데리다 사상의 지리학 적 함의.” 『문화역사지리』 24(3). pp.16-36.
- Agamben, Giorgio 저. 박진우 역. 2008.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서울: 새물결.
- Benhabib, Seyla. 2004. *The Rights of Others: Aliens, Residents, and Citize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radori, Giovanna. 2003. *Philosophy in a Time of Terror: Dialogues with Jürgen Habermas and Jacques Derrid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own, Garrett W. 2010. “The Laws of Hospitality, Asylum Seekers and Cosmopolitan Right: A Kantian Response to Jacques Derrida.”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Theory* 9(3). pp.308-327.

- Derrida, Jacques. 2000. "Hospitality." *Angelaki*. 5(3). pp.3-18.
- Derrida, Jacques 저. 2004. "자가-면역, 실제적이고 상징적인 자살." 지오반나 보라도리. 손철성 외 역. 『테러 시대의 철학: 하버마스, 데리다와의 대화』. 서울: 문학과 지성사.
- Economist*. 2016. (November 19-26).
- Habermas, Jürgen 저. 2004. "근본주의와 테러." 지오반나 보라도리. 손철성 외 역. 『테러 시대의 철학: 하버마스, 데리다와의 대화』. 서울: 문학과 지성사.
- Honneth, Axel 저. 2011. 문성훈, 이현재 역. 『인정투쟁 :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악셀 호네트 선집 1). 고양: 사월의 책.
- Jamssen, Wilhelm 저. 2010. 오토 브루너, 베르너 콘체, 라인하르트 코젤렉 엮음. 한상희 역.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5: 평화』. 서울: 푸른역사.
- Kant, Immanuel 저. 백종현 역. 2013. 『영원한 평화』. 서울: 아카넷.
- Kearney, Richard 저. 이지영 역. 2004. 『이방인, 신, 괴물: 타자의 개념에 대한 도덕적 고찰』. 서울: 개마고원.
- New York Times*. 2017. "We Are Not Burqa': What Does German Culture Even Mean?" (May 10).
- Shryock, Andrew. 2008. "Thinking about Hospitality, with Derrida, *Kant, and the Balga Bedouin*." *Anthropos* no.103. pp.405-421.
- Simmel, Georg 저. 김덕영, 윤미애 역. 2005. 『집협의 모더니티 읽기』. 서울: 새물결.

- ▣ 투 고 일 : 2017년 03월 30일
- ▣ 심 사 마 감 일 : 2017년 05월 12일
- ▣ 수 정 일 : 2017년 05월 17일
- ▣ 최종계재확정일 : 2017년 05월 24일

Abstract

Ethics of Hospitality and Peace

Jinwoo Choi

Encounter with strangers is ever increasing in lieu of relentless globalization. Strangers come to visit us with numerous faces: as tourists, as students, as migrant workers, as somebody's bride or groom, as asylum-seekers, or as refugees, among others. How do we receive and treat those basically uninvited guests? How should we greet them? So far the way a society dealt with others has been a mix of exclusion, discrimination, assimilation, tolerance, and recognition. In particular, the paradigm of recognition on the basis of which contemporary multiculturalism is built upon is reaching its limit and is now in turmoil in many societies. This paper maintains that our attitude towards others should be 'hospitality.' Hospitality means to welcome others with open arms, and to accept others as a part of my self. In the process, my self undergoes transformation. Of course it may be neither possible nor even desirable to practice 'unconditional hospitality', which means welcoming others without asking questions or demanding qualifications. In a real world, thus, hospitality cannot be unconditional but must be circumscribed to some extent. However, we should strive to lower the wall of self-centered conditions that we impose upon others, firmly orienting ourselves toward the ideal of unconditional hospitality. Then we will be able to free ourselves from the yoke of othering process and enter into a stable peaceful relationship with others.

Key Words: hospitality, peace, others, nationalism, multiculturalism

저자 **최진우**는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및 평화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유럽통합, 지역주의, 문화정치 관련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의 주요 연구로는 “난민위기와 유럽통합”(2016), “가치의 구현과 이익의 실현: 규범적 유럽과 북핵문제”(2016, 공저), “민족주의와 지역주의: 동북아 지역통합의 저발전”(2016, 공저) 등이 있다.

к с і